

현안과제연구

2011. 10. 13

# 유럽발 재정위기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수행 : 김양중

# 유럽발 재정위기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수행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목 차

1. 세계경제 위기상황 분석 / 1
2. 중앙정부 대응방향 / 5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6
4. 도차원의 대응방안 / 14

# 1. 세계경제 위기상황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악재가 발생
- 막대한 재정 지출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신흥국들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물가상승이라는 어려움에 직면
- 이러한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해 세계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역시 동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
  - 우리나라의 주동력인 수출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보조동력인 내수는 수출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
  - 높은 물가, 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 또한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회복 지연과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침체 리스크 증대, 금융불안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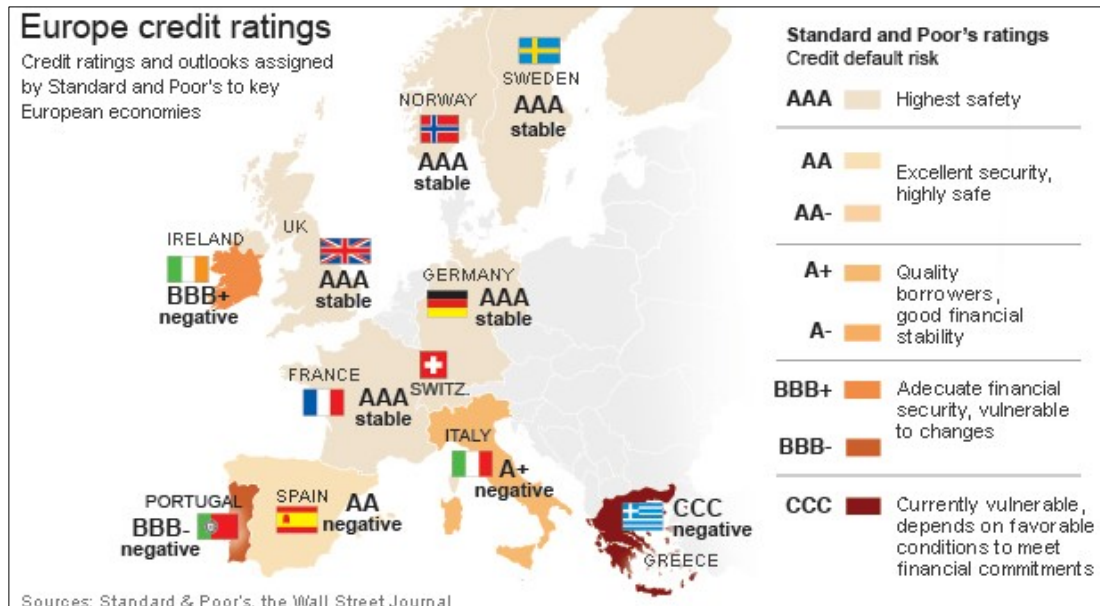
## 1) 유럽 재정위기 현황

- PIIGS<sup>1)</sup> 국가들 중 IMF, EU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탈리아와 스페인 또한 재정악화가 위험수준에 있음
-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가

---

1)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5개국

- 특히 그리스 경제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사회는 위기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그림 2] 유럽의 국가신용등급(2011년 7월현재)

-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공포감으로 인해 국내 주가는 폭락하고 원화 가치도 큰 폭으로 하락

## 2) 국가별 현황

### 가. 그리스

#### ■ 재정위기 원인

- 세수기반 약화, 관대한 연금제도 및 공공부문 팽창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 지하경제 비중이 GDP대비 24.7%로 매우 높고, 노령연금 지출 등 사회복지 지출이 OECD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평균임금대비 연금액이 95.1%로 영국(30.0%), 독일(36.9%)보다 매우 높은 수준

- 또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GDP대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07년 105.4%→ '09년 127.1%)
- 유로화 강세, 비생산적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
  - 유로화 가입 이후 독일 등 주요국 성장에 따라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환율 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대외경쟁력 약화

## ■ 재정위기 현황

- '10.5월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결정되면서,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 그러나, 심각한 경기침체로 '10년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가부도 위기가 재부상
- 추가 지원 합의로 단기 유동성 위기는 완화되었으나, 신용평가기관들은 합의안에 따른 민간의 채무구조조정(만기연장 등) 이행을 선택적 디폴트<sup>2)</sup>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나. 포르투갈

### ■ 재정위기 원인

- 높은 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
  - 강성노조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구조로 실업률이 높고('10년 10.8%), 특히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이 55%를 초과
  - 노동생산성이 EU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 미만(0.93%,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음)

---

2) selective default: 특정 채무에 대해 선택적으로 디폴트한 상태로 그 외의 채무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

- 산업경쟁력 취약으로 경상수지 적자 및 대외채무 증가
  - 제조업분야 기술수준이 낮아 '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누적된 재정적자가 경제위기 이후 대폭 증가
  - 또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

## ■ 재정위기 현황

-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파급된 전염효과로 국제이자율이 상승('11.2월 중순 이후 위험수준인 7%를 상회)하여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 '11.1월 긴축예산안 이후 '11.3월 추가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총리가 사퇴하면서 '11.4월 구제금융 신청
- 5.5일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합의하였으며, 5.16일 EU재무 장관회의는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만장일치로 승인
- 구제금융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다. 아일랜드

### ■ 재정위기 원인

-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부문 부실이 재정악화로 전이
  - 유로존 가입 이후 독일수준으로 국제이자율이 하락(자금조달비용 감소)함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초래
  -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은행부문 부실 심화로, 은행국유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부담이 급증

- '0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 하락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세를 지속해왔으나 '04년 이후 임금 상승 등으로 FDI유출이 심화되었으며,
  -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상수지도 악화
- 더욱이 경제위기 이후 은행부실화 과정에서 신용위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이 더욱 악화

## ■ 재정위기 현황

-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제시장 및 주변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10.11월 구제금융 신청
- EU 및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총 850억유로, '10.11월) 받으면서 금융권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를 추진중
- ECB 및 IMF는 재정건전화와 금융권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11.4월)하였으나, 은행권 부실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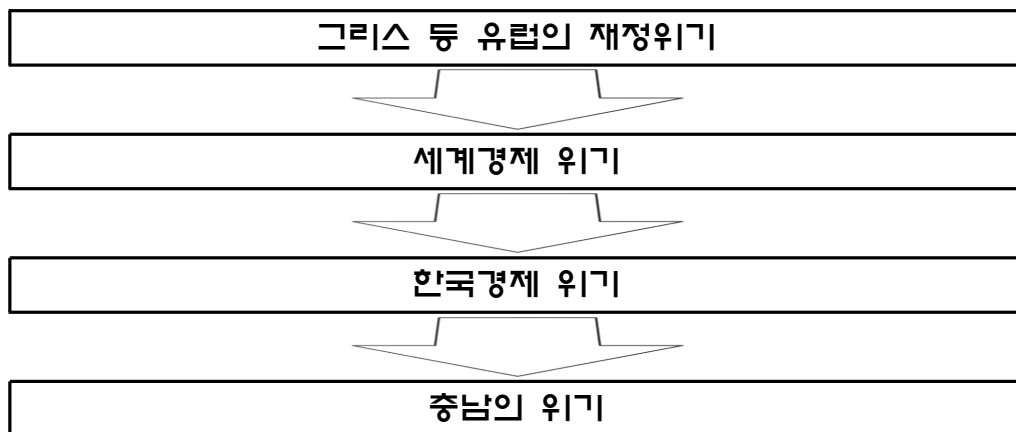
## 2. 중앙정부 대응방향

- 최근 선진국의 재정위기 및 성장세 둔화, 신흥국의 인플레이 확산에 따른 긴축재정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가동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과 국내 물가불안 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청와대는 월 2회 개최되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2011.9.26)하고 금융과 환율, 재정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아울러 경제부처가 주관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
  -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을 논의
  
-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국인 자금이탈과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대부분이 대외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
  - 우리나라의 경우 3천억불이 넘는 풍부한 외환보유액 확보, 자본유출입 완화 방안의 선제적인 시행 및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화유동성 등 위기대응 능력은 높은 편으로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가채무 증대로 공격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는 곤란하고,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향후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물가와 민생 안정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업들도 위기재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성장 기조에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영체질을 확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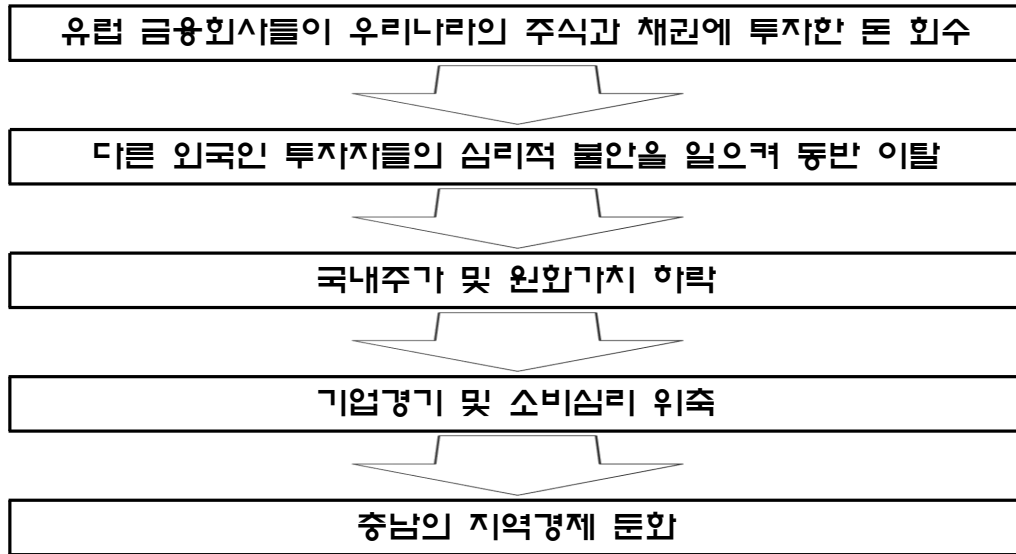
###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2> 그리스 재정위기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





<표 3> 그리스 재정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럽지역 재정위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자금 압박에 몰린 유럽 금융 회사들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일으켜 동반 이탈로 이어짐

## 1) 충남의 경제성장

-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유럽의 재정 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성장에 악영향
- 대외적으로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며 충남의 성장률도 동반하락 할 전망
  - 삼성경제연구원은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6%(2011년 4.0%)로 전망

## 2) 대외거래

- 유럽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유로화약세와 유로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경로를 통한 충격이 예상

- 따라서 유럽의 재정위기는 충남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의 산업은 대기업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구성되어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충남의 수출 감소로 직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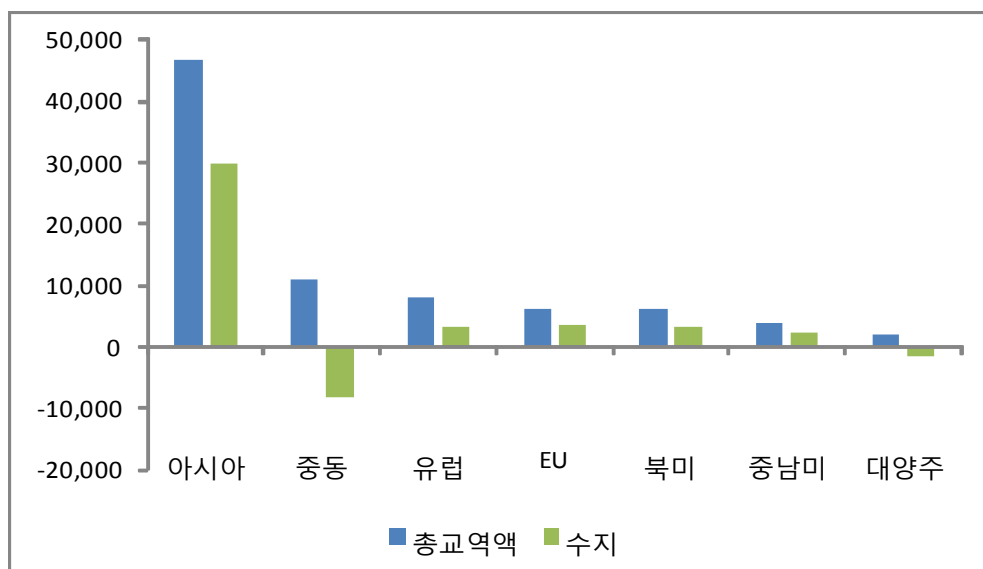
<표 4> 충남의 교역현황(2010)

(단위: 백만불)

대륙	총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아시아	46,829	38,278	8,551	29,726
중동	11,158	1,440	9,718	-8,278
유럽	8,112	5,704	2,408	3,296
EU	6,350	5,065	1,285	3,779
북미	6,309	4,858	1,451	3,407
중남미	4,072	3,232	840	2,391
아프리카	377	236	141	94
대양주	2,088	306	1,782	-1,477
기타지역	1	1	0	1
계	78,946	54,055	24,891	29,160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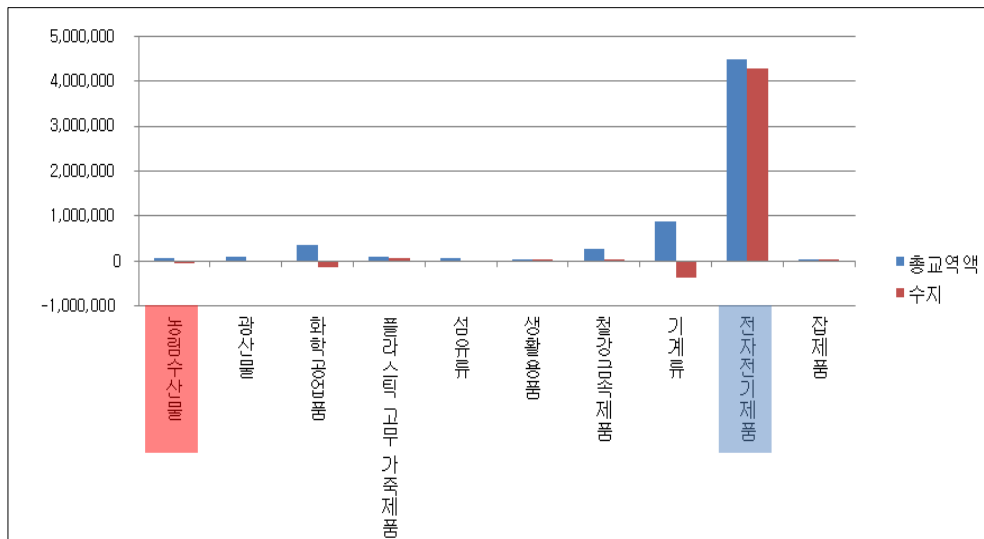
- 충남의 2010년 대 세계 무역은 중동과 대양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은 아시아 다음으로 큰 흑자 지역임



[그림 10] 충남의 교역현황(2010) (단위: 백만불)

- 따라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확대돼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충남의 주력수출품 중심으로 수출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여겨짐

## ■ 품목별 영향



[그림 11] 충남의 대 EU 수출수입(2010)

- 충남의 대EU 업종별 수출현황은 전자전기제품이 8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4.9%) 철강금속제품(2.9%) 순으로 유럽의 재정 위기는 충남의 4대전략산업인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7월부터 충남지역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가 감소로 전환되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승용차 등이 감소세를 지속

<표5> 충남의 대 EU 수출수입(2010)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0)	3,250	0.1	70,996	5.5	△67,746
축산물(02)	696	0.0	19,709	1.5	△19,013
축산가공품(024)	80	0.0	12,926	1.0	△12,846
광산물(1)	33,095	0.7	55,373	4.3	△22,278
화학공업품(2)	105,861	2.1	235,570	18.3	△129,709
석유화학(21)	50,202	1.0	30,017	2.3	20,185
정밀화학(22)	29,334	0.6	166,068	12.9	△136,734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3)	77,001	1.5	27,081	2.1	49,920
섬유류(4)	15,853	0.3	35,059	2.7	△19,206
편직물(436)	455	0.0	0	0.0	455
생활용품(5)	40,423	0.8	4,463	0.3	35,960
철강금속제품(6)	148,548	2.9	110,139	8.6	38,409
기계류(7)	249,009	4.9	636,624	49.5	△387,615
자동차(741)	1,560	0.0	25,426	2.0	△23,866
자동차 부품(742)	135,286	2.7	22,786	1.8	112,500
전자전기제품(8)	4,389,184	86.7	108,545	8.4	4,280,639
영상기기(821)	37,301	0.7	851	0.1	36,450
무선통신기기(812)	54,101	1.1	1,390	0.1	52,711
평판디스플레이(836)	2,988,379	59.0	3,051	0.2	2,985,328
잡제품(9)	2,385	0.0	1,593	0.1	792

자료: 한국무역협회

### 3) 민간소비지출

- 지속되는 높은 물가, 자산효과의 축소, 가계부채 증대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여겨짐
  - 임금상승세 둔화, 물가 고공행진 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부진의 주요인
  -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양(+)의 자산효과 축소, 가계의 부채 확대 등도 향후 소비회복에 부정적인 요인

<표6> 충남의 민간소비지출

(단위: 천원)

지 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sup>o</sup>
서 울	12,750	13,488	14,315	14,848	15,160
부 산	9,073	9,673	10,377	10,908	11,415
대 구	8,632	9,232	9,810	10,401	10,818
인 천	9,095	9,604	10,206	10,819	11,118
광 주	8,832	9,425	10,048	10,531	10,907
대 전	9,711	10,206	10,802	11,283	11,577
울 산	9,839	10,471	11,244	11,798	12,139
경 기	10,335	10,796	11,326	11,838	12,063
강 원	7,830	8,385	9,067	9,639	10,066
충 북	7,540	8,039	8,702	9,230	9,590
충 남	8,014	8,529	9,176	9,771	10,077
전 북	7,228	7,772	8,505	9,192	9,681
전 남	6,810	7,348	8,021	8,665	9,127
경 북	7,597	8,089	8,698	9,210	9,574
경 남	8,340	8,998	9,779	10,375	10,696
제 주	8,430	8,897	9,561	10,075	10,483
전 국	9,703	10,283	10,958	11,512	11,850

자료: 통계청

- 충남의 2009년 민간소비지출은 16개 시도중 11위로 전국평균인 1,185만원보다 적은 1,008만원
- 이처럼 충남은 민간소비지출수준이 타시도보다 낮은 편인데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일련의 상황은 충남의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여겨짐
  - 9월중 대전·충남 소비지출전망CSI는 104로 전월(105)보다 1p 하락
  - 지역별로 대전은 105로 전월(104)보다 1p 상승한 반면 충남은 103으로 전월(109)보다 6p 하락

#### 4) 기업경기

- 기업경기는 환율변동(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재자값 부담 증가 및 해외 대출상환 어려움 등으로 나빠지고 있음
- 수출기업들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당장은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가 상승하고 수출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여겨짐

- 환율 상승이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현재 세계 경제 전망이 너무 어두워 환율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의문
- 특히 향후 2분기 유럽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가 우려
  - 유럽의 경기침체가 일본, 중국 등 다른 지역의 경기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짐
- 2011년 9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sup>3)</sup>**는 83으로 전월(85)보다 2p 하락

<표 7> 대전·충남 업황BSI 추이

	2011.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변동폭
제 조 업	94	91	90	91	91	85	<b>83 (81)</b>	-2 (+1)
대 기 업	103	103	95	97	98	99	<b>92 (82)</b>	-7 (-2)
중 소 기 업	91	87	88	89	89	81	<b>80 (80)</b>	-1 (+2)
수 출 기 업	103	100	96	96	101	100	<b>84 (77)</b>	-16 (+1)
내 수 기 업	90	89	88	89	88	80	<b>83 (83)</b>	+3 ( 0)

주 : 1) BSI = 「긍정」 응답업체 구성비(%) - 「부정」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 )내는 전국 기준

- 대기업(8월 99 → 9월 92) 및 중소기업(81 → 80)은 전월보다 각각 7p, 1p 하락. 수출기업(100 → 84)은 전월보다 16p 하락하였으나 내수기업(80 → 83)은 전월보다 3p 상승
- 업종별로 보면 고무·플라스틱 및 음식료품 등은 상승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합물화학제품·코크스석유정제 및 전자·영상·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
- 수출의존도가 높은 충남의 주요 기업들 타격(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3)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 5) 소비자물가

- 해외발 공급충격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가 불안심리를 부추긴데다 서비스 가격 상승이 가세해 물가상승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국제 곡물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차이나플에이션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차질 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
  -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등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가세
- 2011년 8월중에도 충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지속(7월 4.5% → 8월 5.2%)
  -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6.4% → 7.3%)의 오름세 확대 및 농축수산물 가격(12.6% → 16.1%)의 높은 상승세 등에 기인
  - 전월대비로는 0.9% 상승
- 충남 농산물의 주 수입국인 중국의 물가도 급등하고 있어 농산물 물가 불안도 가중

## 6) 고용시장

- 2011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 폭은 상반기에 비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축소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제조업 일자리 창출 폭이 하반기에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충남의 경제는 제조업기반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분야에서도 취업자 감소가 우려됨
  - 2011년 7월 충남의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상승(6월 1.7% → 7월 2.3%)
  - 2011년 7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

## 7) 주택시장

-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짐
-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 주택구매심리 위축으로 집값 하락과 동시에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짐
  - 유럽발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1년 8월 이후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전국 등 매매가격이 상승세였던 곳은 보합 내지 하락세로 돌아섰고, 하락세를 보이던 지역의 낙폭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봄
- 그러나 충남의 경우 세종시의 훈풍으로 8월중 충남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8% 상승하였고 주택 전세가격은 1.3% 상승(7월 1.0% → 8월 1.3%)하여 전국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여겨짐

## 4. 도차원의 대응방안

-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에서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 더욱이 충남도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발 재정위기는 우리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무역수지 의 악화, 주가하락, 기업의 부도율 증가, 실업률의 증가, 가계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
- 특히 충남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하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성장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임
  - 충남 지역경제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부적인 충격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 1) 중앙정부의 대책 모니터링

- 중앙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과 국내 물가불안 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체제로 전환하였고 지속적으로 금융, 환율, 재정 상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따라서 충남은 국가적 대책과 그 대책이 충남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충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2) 내수기반 강화

- 충남의 경제는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국민경제가 국내 경기에 따른 대내변수보다 세계 경제상황 등의 대외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세계경제가 불안하여 수요가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어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수출입 의존율이 낮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내수기반을 강화하거나 해외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법률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

- 1980년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는 인구와 제조업체 급감이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문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주력하였음
- 이를 위하여 ‘글래스고 액션’이란 민관합작기구를 만들고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였고, 더 나아가 ‘글래스고 개발청’을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 이를 통하여 콘서트홀과 쇼핑센터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예술,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과 서비스 산업 도시’로 재탄생

자료: <http://www.sotongsinmun.com>

- 아울러 내수경기 활성화와 충남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충남형 혁신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은 외국인이 떠난 주식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됨
- 특히 지방경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분야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이들의 지원강화를 통해 경제위기가 민생경제부문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
  -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음식, 숙박, 이·미용업, 운송, 도소매, 학습·학원 및 다양한 가사 서비스업 등을 말하는데,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특성이 있음

### 3) 수입대체 외투기업 유치

-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수요가 감소되어 외투기업들의 도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는 충남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발전수단의 하나로써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는 해외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 등의 도입으로 지역의 산업고도화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특히 외투기업의 유치는 수입대체효과가 커 대외무역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주요수단임

#### 4)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지원강화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기변동에 취약함
  -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충남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고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원자재의 가격상승은 투기수요를 유발하여 충남의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충남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커 지원의 효과가 큼
- 아울러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거래선 확대를 통해 급격한 경제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감소로 부품 및 하청생산 구조의 최하위체계를 형성하는 영세업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의 감소로 인한 영세업체의 피해는 충남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짐

#### 5) 내발적 역량강화

- 대외여건 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자원에 근거한 지역 경쟁력 확보가 중요
  - 2009년 충남의 GRDP는 66조로 16개 시도 중 5위이며, 특히 1인당 GRDP<sup>4)</sup>는 3,370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2위
  - 충남의 2000년 이후 연평균 GRDP 성장률은 9.1%로 16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4) 1인당 GRDP는 울산(4,623만원), 충남(3,370만원), 전남(2,864만원), 경북(2,655만원), 서울(2,565만원) 순

- 이처럼 충남의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왔고, 수치적으로만 살펴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경제우위 시도임
  - 그러나 이런 성장 속에서도 세계경제불안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충남의 경제는 그 한계가 들어남
- 따라서 충남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며, 내발적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필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6) 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

- 경기둔화로 충남이 직면한 양극화, 불균형 발전 등이 더욱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수
- 충남의 성장이 4개시군(천안·아산·서산·당진)에 집중되어 충남경제는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발생
- 지역기업의 어려움 가중 소비심리 저하 서민생활어려움 가중에 따라 서민 생활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노력
-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함

## 7)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는 일자리 창출의 감소로 직결됨
- 충남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함

-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시는 폴크스바겐과 노사정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그 결과 '아우토비전 프로젝트(Autovision Project)'가 수립되었고, 1999년에는 시 정부와 폴크스바겐이 공동출자한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가 설립
-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는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로 창출된 일자리를 지역내 구직자와 연결시키고 각종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핵심 사업을 추진
- 아우토비전 프로젝트는 7년 동안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00여개 기업의 창업지원으로 7,5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시 전체적으로는 2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 나아가 폴크스바겐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제조-유통-관광-컨설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전후방 연과효과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자료: <http://www.sotongsinmun.com>

-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필요
  - 마이스터고 등 기능 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인턴쉽과 직장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연계를 강화
  - 중소기업 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 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 또한 해외인턴 취업지원 사업을 늘려 해외 인턴경험이 국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8) 충남의 재정건전성 확보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충남도 또한 재정상태의 제약 속에서도 국책사업 및 국비지원사업의 무리한 매칭을 위해 지방재정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충남의 충남의 재정자립도<sup>5)</sup>는 36.6%로 16개 시도 중 10위로 전국평균인 52.2%도 미치지 못하였음

5) 재정자립도는 서울(85.8%), 경기(72.8%), 인천(70.4%), 울산(67.2%) 순

- 지방재정의 위축은 지역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충남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과 예산의 배분에 보다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